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5회 |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3. 7. 13(목) 09:30~11: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주 최



대한민국 국회
NATIONAL ASSEMBLY

주 관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프로그램

개회식

09:30~10:00

사회 이예재 아나운서

1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

축사

하태경 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영표 한중의원연맹 회장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진 외교부 장관

발제 및 토론

10:00~11:30

2

기조연설

[세계질서 대전환기 의회의 역할]

반기문 보다는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좌장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

김한정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성균중국연구소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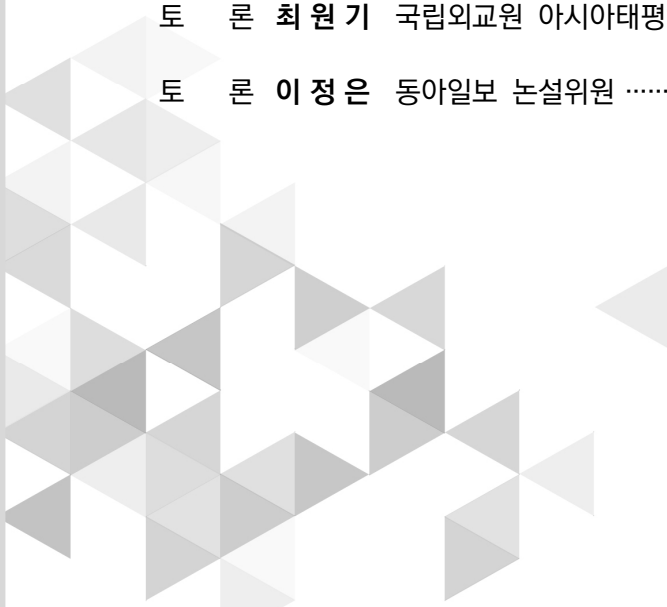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폐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목 차

개 회 사 김 진 표 국회의장	8
축 사 하 태 경 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10
축 사 홍 영 표 한중의원연맹 회장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
축 사 박 진 외교부 장관	15
기조연설 반 기 문 보다는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 제8대 유엔 사무총장	17
토 론 김 한 정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
토 론 최 형 두 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26
토 론 서 정 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8
토 론 이 희 욱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성균중국연구소장	31
토 론 최 원 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35
토 론 이 정 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49



개회사



국회의장 김진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주제는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님과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 국회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가 ‘대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이어오던 탈냉전 질서도 중대한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며, 세계 각국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모색에 분주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과 국제질서 변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과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가 경제와 민생은 물론,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교력이 국가경쟁력인, 외교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질서 재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능력 있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국제무대의 제일선에서 글로벌 이슈를 관리하신 경륜과 통찰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3.

국회의장 김진표

축 사

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태경**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sets of three horizontal dotted lines.



축 사



한중의원연맹 회장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영표**

안녕하십니까? 한중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복합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 등 지금의 세계정세를 표현하는 많은 다양한 수사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위기’와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로 바꿔내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으로 상징되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AI를 비롯한 과학기술 발달이 이끄는 4차산업 혁명과 양극화 심화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등은 전지구적 과제로서 기존 질서를 깨뜨리며 새로운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소위 BRICS 국가들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Martin Wolf)는 2008년 G20 1차 정상회담 관련 기사 제목인 “Goodbye G7, hello G20”을 언급하며 G7이 세계를 운영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롭게 부상한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간의 패권경쟁은 세계질서 변동의 중요한 축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RA, 반도체과학법 등을 추진하며 '반도체 전쟁'을 벌였습니다.

경제 뿐 아니라 외교와 군사적 대응 또한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행보는 ‘국익’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미중 양국의 격렬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은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 6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뒤 미중 양국의 입장입니다. 이어 7월 초에는 옐런 재무장관까지 방중하며 대화를 통한 양국간 관계 개선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옐런 장관은 양국간 안보 긴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양국간 기록적인 교역액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 확대를 위한 ‘충분한 여지’(ample room)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6,906억 달러, 지난해 미중 교역량입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1,53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전체 매출액의 7.6%(2022년)를 중국 시장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크잉(de-risking)을 추구하는 것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합니다. 대외적으로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철저히 현실을 기반으로 한 ‘국익중심’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뿐만이 아닙니다. 블링컨 방중 직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또한 “북·중·러와 외교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미일 공조,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외교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하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정치·경제·외교 모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외교 또한 국익 중심의 접근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우리와 중국은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했고,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액은 47배, 투자 규모는 48배 증가하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며, 한국 또한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미일 편향 외교와 최근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자동차의 중국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늘어난 12.3만대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4년 만의 증가이고, 상반기 판매량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국회 역시 다양한 외교를 통한 국익의 확대가 더 중요해진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중의원연맹을 결성한 것은 의회와 의원외교를 통해 양국소통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빚어진 한중간의 외교 갈등으로 중국 측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한중의원연맹의 방중 일정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이 때에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로 열리는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전환기에 우리나라가 마주한 도전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의회외교 발전에 밑거름이 될 고견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7. 13.

국회의원 **홍영표**

축 사

외교부 장관 박 진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제5회 |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좌 장

전 재 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 론

김 한 정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 형 두 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 정 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희 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성균중국연구소장
최 원 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이 정 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김한정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20세기는 전쟁과 평화,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변주곡의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향방이 새로운 글로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미국 중심의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냉전적 대립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국제 환경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도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디지털 강국입니다. K-컬처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한국의 이미지는 급상승 중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세계 질서 변화를 간파하고 잘 대응해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세기 전반기는 양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으로 점철된 전쟁의 시대였고 국제질서 급변의 시대였습니다. 20세기 후반기에는 강대국 간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역설적으로 ‘긴 평화’의 기간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미국과 구소련 양대 핵 강국이 냉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공멸의 공포 즉,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확증파괴)가 핵전쟁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핵무기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생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선제사용 위협, 이란의 핵 개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 사용 위협, 심지어 한국에서 독자 핵 개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핵 능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탈냉전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 위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말 시작된 냉전 해체의 신질서는 미국 우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였습니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승리였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체할 더 이상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화(Globalization)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된 지구가 교역과 교류를 극대화해 인류를 공동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우세했습니다. 중국의 개방과 글로벌 시장 참여 확대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G2로서의 중국 부상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게 되었고 따라서 미·중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해진 중국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강대국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이제 중국 위협론은 워싱턴의 지배 담론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중국은 흑묘백묘(黑貓白貓)와 도광양희(韜光養晦)의 자강론이었습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중국은 유소작위(有所作為)와 화평굴기(和平崛起)였습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은 다릅니다.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요구했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 협력 공영하자”는 좋은 말입니다만 미국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우세합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중국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 재균형(Re balancing)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 견제는 미국의 민주당·공화당 정권을 가리지 않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서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첨단 반도체 수출금지와 공급망의 탈중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동맹국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일대일로 확장을 견제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내세우면서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빚어낸 불안정성은 신냉전 안보 갈등을 심화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후퇴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극한 대치와 북한의 도발 억제 과정에서의 군사 충돌은 동북아에 그치지 않는 글로벌 위기로 비화될 것입니다. 미국도 ‘America First’라는 자국중심주의로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술과 수출 시장을 크게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점점 불리한 대외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2. 방황하는 대한민국 국가전략

대한민국에 정립된 국가전략이 있습니까? 국가전략이 정권이 바뀌면 거의 180도 뒤집힌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대북 전략이 그렇고 대미 대중 전략이 그렇고 대외 경제전략도 모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 안보론이 강조되면서 안보적 고려가 우리의 경제 국익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난제가 앞에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과 설비 투자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보조금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이차전지 같은 전략산

업의 향방은 우리 국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맹 강화와 대미 추종은 우리 안보와 경제에 새로운 위협을 불러오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동맹이 북의 위협을 억지할 수는 있겠지만 북핵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미 추종이 대중국 결연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은 균형보다 쏠림이 심하고 조화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책 운용은 결과적으로 장기적 국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의 반발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망도 전략도 부재한 속에서 대북한 강경일변도 정책은 군사적 긴장을 넘어 자칫 통제 불능의 안보 위기 사태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은 교역규모로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섰고,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국방력도 세계 6위권으로 평가됩니다. K-컬처, K-브랜드가 국제적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미주와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전역에서 한국의 문화와 상품들이 호응받고 있는 것은 K-컬처가 보편성을 획득해 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외교는 미국과 일본에 치중해 있습니다. 대중 관계에 소홀합니다. 유럽과 신남방 협력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진영대결로 인한 국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외 정책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보수-진보 갈등과 대립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냉탕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냉전적 이념 프레임으로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폄하하고, 심지어 대북 선제타격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접근은 전략적 접근과 거리가 멉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책임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대미 일변도 외교는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중관계 악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니라 리스크 감소(de-risk)의 방향으로 중국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의 노력도 이익 불균형이 심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부르는 정책이 자주 나오는 것은 국가전략이 초당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탓이 큼니다.

3. 초당파적 국가전략의 토대를 국회에서

국가전략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공전략입니다. 국가전략은 속성상 중장기적 성격을 띠니다. 정권 교체와 정치 리더십 교체가 파동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경우 안정적이고 일관된 국가전략 수립과 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권의 이념과 이른바 '국정과제' 수준의 제약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이 요구됩니다. 국회는 여론이 모이고, 정파들의 일상적인 협상이 이루지는 정치 공간입니다. 통합적 국론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 공간에서 국가 아젠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국가전략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가전략 수립의 기초 인프라로서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아젠다는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첨단과학기술의 육성입니다. 둘째, 안보와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후 대응 인구 환경 보건 등 미래 대비 연구와 정책개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기반으로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상당한 국방력과 안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있고 동맹에 의존적입니다. 외교도 정부 독점적입니다. 초당 외교는 형식적입니다. 의원 외교는 주변적 지위와 제한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초격차를 유지 확대해 나가고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이점을 국제 협상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보건·기후 대응·개발 협력에 있어서 인적 역량, 기술과 인프라 등에서 우리는 우수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백신 개발과 국제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에서 한국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활용도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해외 이주만 200만 명이 넘고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세계 각지에 730만 명의 한국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든 성공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과학, 교육, IT 산업, 금융, 문화·예술에서 두각을 보이는 한국계 엘리트들이 많고 정치에도 적극 진출해서 주의회와 연방의회에서 여러 명의 한국계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브레인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전략 수립에도 참여하고 정책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내 인도계의 경우 의료서비스, IT 프로그래머, 스타트업, 금융계 등 주요 분야에서 활약이 눈부십니다. 이들은 본국 인도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 의회 외교 강화를 위해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민국 국회 해외 사무소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워싱

턴과 베이징, 다자외교 중심인 뉴욕과 제네바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전략 수립에 국회의 기여도를 높이려면 몇 가지 제도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각 부처에 대응하는 형태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임위 중심 그리고 보조적 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으로는 국가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2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17개의 상임위원회,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예결위, 윤리위) 그리고 7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현안을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법률안 심사 권한이 없습니다. 실효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①부산세계박람회 유치 ②형사사법 개혁 ③정치개혁 ④연금 개혁 ⑤인구 위기 ⑥기후 위기 ⑦첨단전략산업특위

상임위원회의 개편에는 준비와 시간이 소요되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가 전략과제 연구와 기초적 논의를 담아낼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국회는 상설특위인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통해 내실 있는 논의를 해나가고 행정부와 협의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다양한 국책 연구기관과 협동 또는 독자적으로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아젠다 설정과 운영을 긴밀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법안과 예산 심의 권한을 주어서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권을 초월한 초당적 협의와 합의가 국가전략 수립의 핵심적 기초입니다.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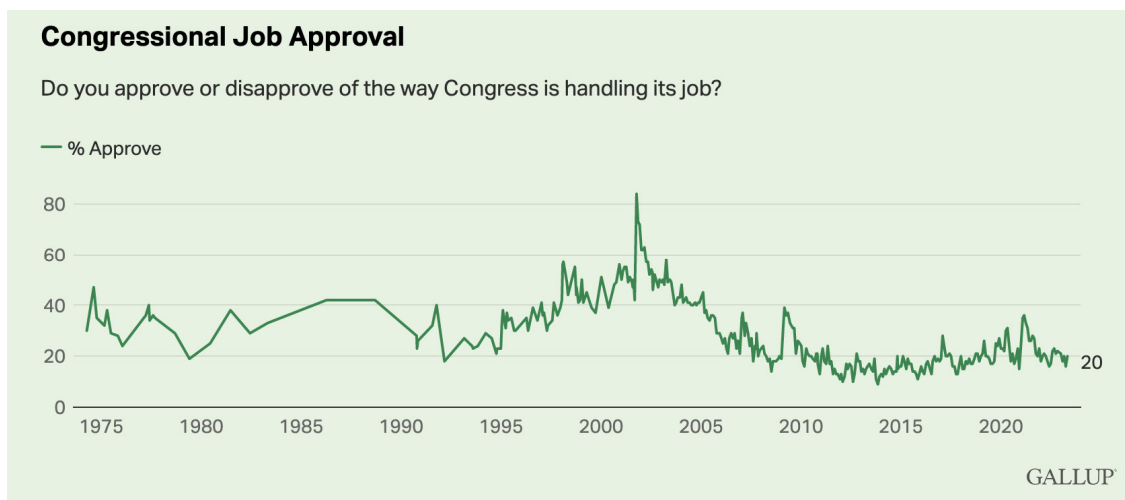
최형두 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 미국 의회 현황이 주는 시사점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의회라고 평가받는 미국 의회 역시 의회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낮은 편으로 2023년 5월 24일 현재 미국 국민들의 20퍼센트만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림. 이에 비해 대통령 경우 40퍼센트를 분기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바이든 경우에도 30퍼센트 후반에서 40퍼센트 초반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음.



- 특히 미국 의회와 외교 안보 정책 분야에서는 rank-and-file 의원들의 존경을 받는 외교 정책 중진 의원들(foreign policy heavyweights)이 존재해 왔음.
- 냉전 초기 초당파적 외교 정책을 위해 트루먼 행정부와 협력했던 밴덴버그(Vanderberg),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존슨 행정부 견제를 정책 청문회를 통해 추진했던 풀브라이트(Fulbright), 클린턴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헬름스(Helms) 상원 위원장 등이 있었고 Dick Lugar, Sam Nunn, Joe Biden, John Warner, John McCain 등 외교 정책 중진 의원들이 활동하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 한편 골드가이어와 손더스(Goldgeier and Saunders 2018)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트럼프 개인의 독단적인 외교 정책을 막지 못했던 미국 정치의 현실적 배경 중 하나로 이들 외교 정책 중진 의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고 있음.¹⁾ 대표적인 예로 그 동안 McCain 의원과 함께 외교 안보 분야에 주력했던 Lindsey Graham(R-SC) 상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하여 외교-국방 위원회에서 옮겨간 사례가 있음.

II. “일하는 의원”과 정책 기업가형 의원(Congressional Policy Entrepreneur) 제안

1. 정책 기업가형 의원 개념

- Wawro(2001)는 “정책 기업가형 의원”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미국 의회에서 평가받는 기업가형 전문가 의원에 대한 주제들을 소개함.²⁾
-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의원 경우 법안을 일종의 상품으로 보고 여론(시장)과 표결(국회)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법률(판매)로 입법하는데 성공함.
- 이를 위해서는 시장 조사(동료 의원들과 유대) 및 홍보 전략(미디어 접촉을 통한 지지 여론 조성)이 필수적임. 필요에 따라 지도부를 설득하거나 회유할 수도 있음.
- 이를 통해 현재 “미스터 쏜소리”만 존재하는 의원들의 정체성을 “미스터 이슈”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다시 말해 “미스터 북핵,” “미스터 방역,” “미스터 한일 관계” 등 의원 개인의 정책 전문 분야 발굴 및 홍보를 통해 평판(reputation)을 쌓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함.

2. 외교 정책 기업가형 의원(congressional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 Carter and Scott(2009)은 특히 미국 의회와 외교 정책을 둘러싼 기업가형 의원에게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함.³⁾
- 다양한 국내 정책 못지않게 현재의 양극화 정치를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외 정책 분야의 “일하는 의원”이 절실하게 요구됨.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남북

1) James Goldgeier and Elizabeth N. Saunders. 2018. “The Unconstrained Presidency: Checks and Balances Eroded Long Before Trump,” *Foreign Affairs* 97(5): 144-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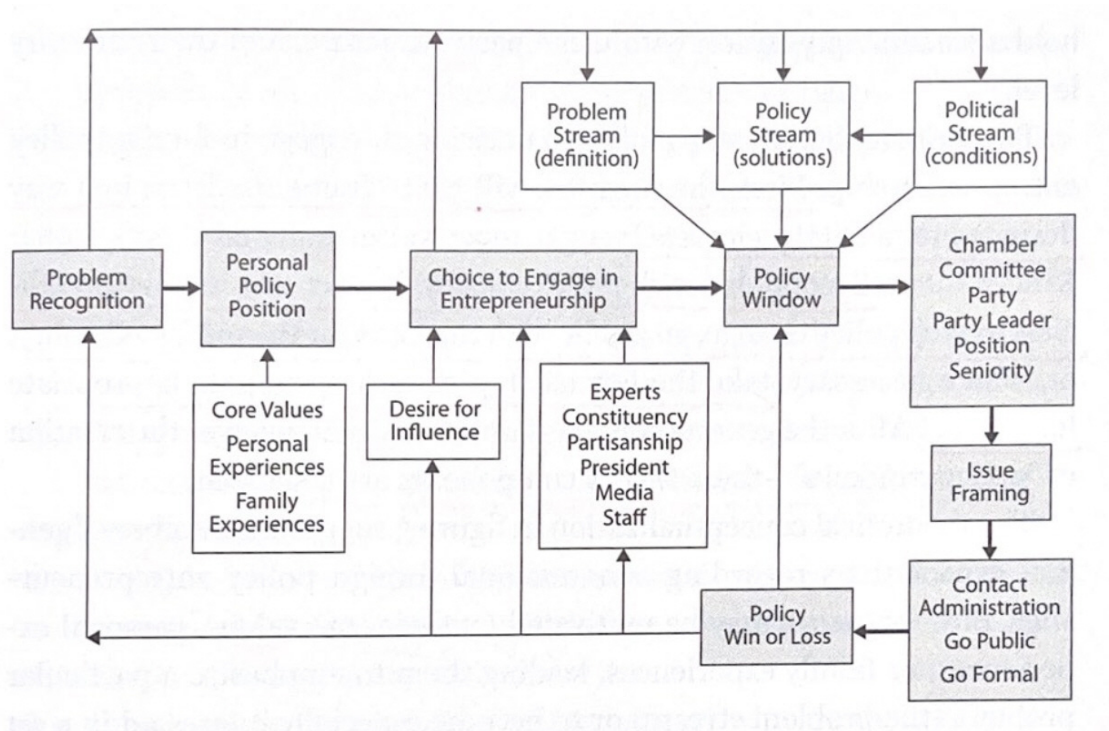
2) Gregory Wawro. 2001. *Legislative Entrepreneurship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3) Ralph G. Carter and James M. Scott. 2009. *Choosing To Lead: Understanding Congressional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관계 등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둘러싼 대외 관계가 주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과 유연한 전략을 위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토론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함.

- 아래의 외교 정책 기업가형 의원 체계를 살펴보면 이슈에 대한 인식부터 정책 입안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음.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켜 볼 수도 있을 것임.

〈외교 정책 기업가형 의원 체계〉



출처: Carter and Scott (2009, p. 29)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성균중국연구소장

세계는 지금

- 세계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있고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블록화, 진영화, 보호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도전 국가이자,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대해 가치동맹의 강화, 우호 국가의 규합, 지역 안보의 외주화, 중국의 기술부상에 대한 사다리 건너차기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국가자본주의, 국가 관료주의를 문제 삼고 있으나, 미국도 실제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쓰고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가치외교를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진영외교, 이념외교로 변질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나 최근 Home shoring 정책은 결국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면 글로벌 공공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치를 확산시켜온 그간의 전통이 약화되는 것도 수용한다. 이렇다 보니 국제사회는 이른바 ‘킨들버거 함정’을 경계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서로에 대한 비난게임(blame game)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에 앞서 세계는 근본적으로 분절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지구화-반지구화-재지구화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냉전(the New Cold War)의 한계도 여기에 있다. 과거 냉전의 질서로 되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사실 적대적 이데올로기, 블록화된 경제질서, 배타적 군사동맹에 기초한 구냉전이 21세기에 그대로 재연되기는 어렵다. 중국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소비할 국가가 없고 상호의존은 무기화(weaponized)되어 있으며, 중국외교정책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비동맹을 유지하고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국 외교는 ‘편승’의 프레임에 빠져 일종의 적대적 공존에 빠지면서 세계평화의 길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 글로벌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다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인류의 미래질서라는 것에 대해 신념의 위기가 나타나는 원인에는 오랫동안 강대국 정치, 강요된 질서에서 배태된 계서적(階序的) 사고 속에서 ‘타자’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서방 선진국들의 글로벌 남부(Global South)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발전이니셔티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강대국 국제정치는 환경과 글로벌 불평등에 대해 어젠다를 생산하고 발신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절박성은 약하다. 사회적 문제(social fabric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선진국은 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간의 노동을 오직 생산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지구의 인구는 지금도 너무 많다. 어떻게 노동력 이동과 혼합적 정체성(hybrid identity)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 글로벌화는 가치의 보편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탈세계화는 가치의 진영화, 이념화를 선택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대신 경제안보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경제안보라는 말은 모순적인 개념이다. 모든 국가는 효율성과 취약성, 안전과 상호의존 속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효율성을 위해 취약성을 감수하지만, 중상주의는 자주성을 위해 효율성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안보 전략도 중상주의적이며, 심지어 중국이 산업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이를 비난하거나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이슈별로 다양한 다자주의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국가가 다양한 다자주의에 두루 참여할 수 있는 확대균형(extended equilibrium)에 대한 길을 터주어야 하며, 또 하나는 장 모네의 지적과 같이 “단순한 국가의 결합이 아니라, 시민들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글로벌 시민사회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국회의 역할

- 민주주의의 본령은 참여와 숙의에 있다. 한자의 ‘選舉’도 선출(選)과 숙의(擧)라는 개념이다. 국회는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정치는 populism 심지어 tribalism으로 나뉘어 있고 웬만한 정치적 의제는 모두 프레임 속에 갇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다양한 정치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정치 권력과 무관하게 국회 본연의 숙의와 협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외교정책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정파적으로 행동해 왔고, 여야의 정책 진자(振子)의 축이 지나치게 넓게 작동하면서 비싼 매몰비용(sunk cost)을 지불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정파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기의 영역이자 지혜의 영역이며, 차이를 섬세하게 다루는 예술의 영역이다.
- 국회의 많은 역할 중에서도 의원외교, 의회 공공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의원들이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창의적으로 기획한 국회다움의 의원외교는 한계가 있다. 공공외교가 다른 국가 사람들의 마음(hearts and mind)을 얻는 것이라면, 의원 공공외교는 쌍방향, 지속가능성, 미래지향성, 체감형 사업을 통해 타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 여야 의원 10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한중의원연맹이 사단법인의 형태로 출범했다. 이것은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의지와 추진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한일, 한중의원연맹과 함께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 의원외교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 한중의원외교의 실질적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한중관계가 어렵고 보기에 따라서는 사건이나 국면의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대화 채널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 싸움’이라는 감정의 교(sensibility in diplomacy)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한중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다만 국회는 정부 외교의 주요한 어젠다에 대한 해석 투쟁을 지양하고 보다 미래지향적 어젠다를 통해 양국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양국의 국회(전국인대)의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그리고 국회내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인구문제, 스마트도시, AI 표준, 미래산업 등 미래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통해 상호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 두 가지 질문

- 미국의 디커플링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역 가치사슬로 묶여 있는 동아시아의 대미 수출이 증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산업 등 부분적 디커플링을 의미하는 디리스킹의 최종상황(End State)은 무엇이고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한가? 미중간에도 협력과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초격차, 초연결, 초일류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의 생존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시효를 다했다고 보고 안미경미(安美經美)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논의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재(club goods)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도 줄지 않는(주로 수출경쟁력의 취약) 상황을 고려하면 쉬운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부상한 중국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미관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미일 안보협력강화의 목표가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국을 향해 있다. 이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터주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데 한미일 협력의 범위와 방향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한중일 협력은 또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 한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상호인식이 악화되고 한중경제관계의 구조변화가 나타나면서 한중관계를 받치는 축도 약화되고 있다. 국가정체성이 곧 가치이고 이익의 근저라는 점에서 가치와 국익은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유독 중국에 대해서는 가치(사실상 진영, 이념)외교를 전개한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유럽국가 일부는 물론이고 미국도 국방부와 국무부 그리고 재무부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대중국정책의 지속과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은 넓은 합의에 기반한 외교적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관계 실마리는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1. 대 중국 외교에서 국내적 분열 극복 및 초당적 합의 형성 과제

○ 한국의 당면한 외교안보적/경제적 주요 핵심 도전과제의 대부분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되어 있으나, 국내 주요 정치세력, 즉 보수와 진보 정치세력은 중국에 대한 전략인식, 대 중국 외교적 대응 논리 및 선호하는 대중 외교정책의 면에서 현격하게 상이하고, 심지어 대립되는 입장/해법을 견지하고 있음.

○ 한마디로 현재 한국은 대중 외교안보 정책에서 국내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향후 한국의 외교적 사활을 모색하는데 최대의 정치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첫째, 우리의 최대 안보 불안요인인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종국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거나, 최소한 중국이 한국이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토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하지만 한국내 주요 진보-보수 정치세력은 북한 비핵화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매우 대립되는 견해와 해법을 가지고 있음

○ 둘째, 한국은 정치체제 및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중국과 안정적인 외교안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나,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의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중국은 한국의 대미경사/대미추수로 인식하고 있고, 이는 중국의 “합리적 안보우려”를 무시하고 중국에 적대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와 지향을 저지/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외교안보에 중대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진보-보수 정치세력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외교적 행보, 즉, 균형외교 vs 한미동맹 강화로 분열되어 있음

- 셋째, 무역의존도 약 27%, 반도체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및 핵심 광물 등의 주요 수입원인 중국에 대해 한국은 현재 절대적인 경제적 의존상태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제약은 우리의 선택지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안보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국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적 제조업 공급망 확보,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핵심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 공급처 확보 등 중국과 관련된 주요 경제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음.

- 넷째, 보다 거시적/장기적/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의 최대의 외교안보적 도전과제는 이제 미국에 필적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국력이 강성해지면서 ‘중국몽’ 등 자국 중심주의 외교기조를 강화하는 중국에게 한국이 주권과 국가적 존엄을 무시당하지 않고,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중국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절대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하에 놓여있는 동아시아에서 정치체제/가치/전략적 지향이 상이한 한국이 중국의 인접국으로서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최대의 외교안보적 도전과제임.

※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중국에 대한 ‘포용적 협력’을 강조하는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을 최대의 “안보적 우려”로 인식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선명한 외교안보적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일본이나 호주와 달리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외교안보적으로 각을 세우지 못하지만, 각자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e.g.,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 후 최근 필리핀>

-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ISEA-Yosuf Ishak Institute)가 매년 실시하는 동남아 여론주도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전략적으로 가장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역외국가로 압도적 다수가 중국을 지목하고 있으나, 이들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는 높지 않고, 오히려 역외 강대국 중에서 중국을 경제적/외교안보적으로 가장 큰 우려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음. (※ 참고자료 2 참조)

- 인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미중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립적인 ‘독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내의 주된 인식이나 이는 인도의 외교안보적 인식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 인도는 현재 국경분쟁 중인 중국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호주와 “쿼드”를 통한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중국의 1/5에 불과한 종합국력을 가진 인도는 자국에 대한 “전략적 봉쇄 (strategic encirclement)”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을 삼가면서,

중국에 대한 연성균형(soft balancing)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요컨대, 이미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현재 그리고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적 활로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구조적 상수이며, 중국에 대한 외교안보적 대응에서 한국이 향후에도 초당적 컨센서스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보/보수 정치세력 간 대중외교에서 분열을 계속한다면, 우리 대중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고사하고, 중국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 대 중국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적 분열은 한국 외교의 ‘아킬레스건’이며, 이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초당적 대 중국 컨센서스”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밝은 한국 외교의 미래는 요원할 수도 있음.
-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대북/대중/대미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적인 초당적 컨센서스 형성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국력에 비해 왜소한 한국외교의 전략적 역량 강화과제

- 한국은 GDP 세계 10위권의 선진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신장된 국력에 비해 지역 및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전략적 존재감, 외교적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신장된 국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략적 역량 및 존재감의 문제는 국외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 첫째,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가 매년 실시하는 동남아 10개국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세안의 주요 역외 파트너 국가 즉, 아세안 대화상대국(ASEAN Dialogue Partners) 중에서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적 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3: Survey Report: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가 동남아 10개국의 학계, 관계, 경제계, 민간단체(NGO) 및 지역기구 등 여론 주도층(1200~1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말 설문조사를 실시, 이듬해에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 배포하고 있음.

- 아세안 대화상대국 (호주, 중국, EU,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중에서 규칙 기반질서 유지 및 국제법 수호를 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항목에 아세안 여론주도층이 한국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0.8%임.

- 이에 반해 일본 (8.6%), 중국 (5.3%), 그리고 뉴질랜드 (2.9%)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고 신뢰할 만한 제3의 파트너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라는 질문항목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6개국 (호주, EU, 인도, 일본, 한국, 영국) 중에서 최하위인 3.2%에 불과함.
 - 이에 반해 일본은 26.6%로 EU (42.9%)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함.
 - 특히 아세안 개별 국가별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동남아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베트남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29.4% 대 0.0%
 - 인도네시아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36.4% 대 4.1%
 - 싱가포르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25.5% 대 1.9%
 - 필리핀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39.4% 대 4.0%
- 설문조사 결과 중 특이한 것은 베트남 엘리트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도가 0.0%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높은 경제협력 관계, 전임 정부의 신남방정책 등을 통한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외교적 투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아스러운 결과임.
- 둘째, 호주의 유력 외교안보 연구기관인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가 매년 실시하는 아시아 국력지수 (Asia Power Index 2023), 조사에서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외교 네트워크 및 문화적 영향력 등을 포괄하는 종합국력에서 아시아 26개국 중 7위를 차지한데 비해 다자차원의 외교적 역량(14위), 지역/글로벌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10위), 그리고 국가외교 목표 달성 및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지도력(11위) 등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참고자료 1 참조)
- 아시아 16개국 중 14위로 파악되는 한국의 다자차원의 외교 영향력(Multilateral Power) 지수는 주요 다자 개발은행 투표권 (7위), 유엔 분담금 (4위), 유엔 총회 투표 행태 (23위), 유엔 총회 투표 주도적 참여 정도 (8위), 소다자/다자 협의체 참여 정도 (외교장관 또는 정상 수준) (13위)를 반영하고 있음.
- 동아시아 국력지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다자 차원의 외교 영향력 약화의 원인은 유엔 총회 투표 행태 (23위) 및 소다자/다자 협의체 참여 정도 (외교장관 또는 정상 수준) (13위)에 기인하고 있음.

- 한국의 유엔 총회 등에서의 투표행태는 아시아 26개국 중 23위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인권문제 등 국제규범 등과 관련 유엔총회 및 부속기구의 결의안 투표 등에서 한국의 소극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의 외교장관급 또는 정상 수준에서의 소다자/다자 협의체 참여 빈도수 또한 아시아 26개국 중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이 동아시아 및 인태지역 등 지역적 차원의 소다자 협력, 그리고 유엔 등 글로벌 차원의 다자협력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시사함.
- 이는 특히, 한국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국제협의체에 대한 참여에서 비슷한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비슷한 종합국력을 지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한국의 외교적 관여와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 또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거나 지역/글로벌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외교적 역량(foreign policy) 지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26개국 중 10위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주된 원인은 지역/글로벌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10위) 및 전략적 비전/지도력 발휘 정도 (11위)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이 지역차원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그동안 인·태지역 역내의 최대 안보문제 중의 하나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립을 견지하면서 가급적 외교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조용한 외교’ 기조를 견지해 왔음.
-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 및 수출입 상품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주요한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견지해 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의 목표는 중립 및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서 외교적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음.
-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남중국해서 진행되어 온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외교적으로 침묵함으로써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암묵적 동조하는결과로 이어졌음.
- 한국은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아세안안보포럼(ARF), ASEAN+3, EAS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현재까지 남중국해 분쟁 상황에 대한 공식적 우려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남중국해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구단선(nine dash line)이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의 결정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번도 공식적 외교 무대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임.¹⁾
- 남중국해 분쟁 이슈에 대한 한국의 이러한 ‘방관자적인 태도’는 베트남을 비롯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향후 국제법과 다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중국해 관련 외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를 비판하는 다자주의적 입장 표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존재감이 국력에 상응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남중국해 문제와 같이 우리의 국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시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대응을 해 온 한국 외교의 관행과 행태에 기인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적 시야와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 주요 이슈들에 대한 관여와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선진국 지위와 책임에 부합하는 외교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한국의 외교역량 강화 및 전략적 역할의 확대를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끝/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참고를 참조. 최원기, 한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외교, 제 140호, pp.127-149. 2022.1, 한국외교협회

한국의 외교역량 평가: 참고자료 1

호주 Lowy Institute, *Asia Power Index 2023*.

<<https://power.lowyinstitute.org/countries/south-korea/>>

한국의 **종합국력**: 아시아 26개국 중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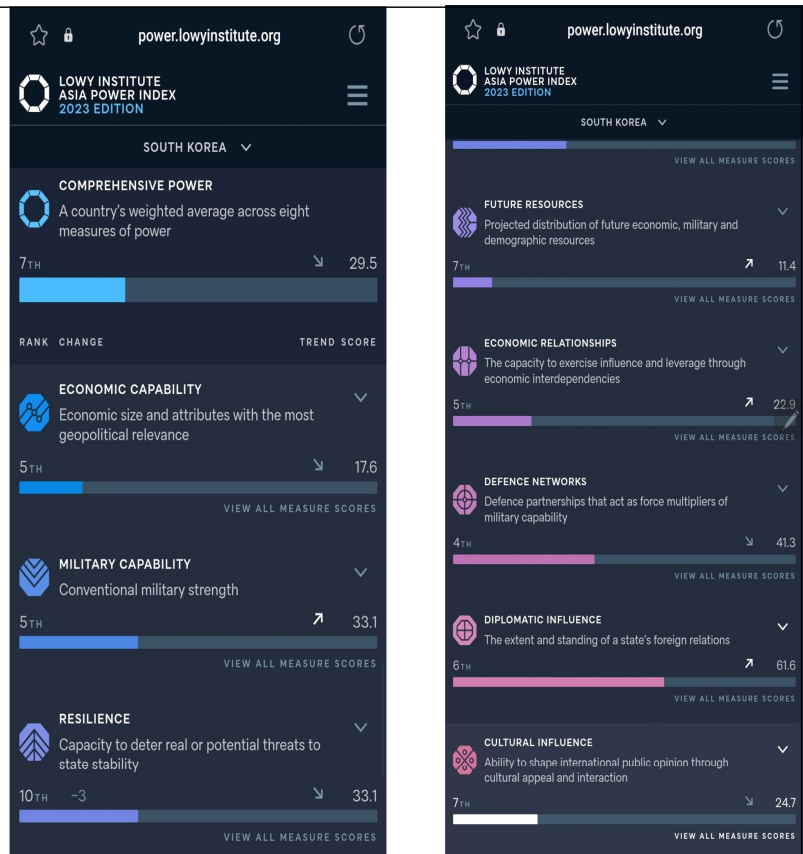
(출처: 호주 Lowy Institute, *Asia Power Index 2023*)

<<https://power.lowyinstitute.org/countries/south-korea/>>

power.lowyinstitute.org			
LOWY INSTITUTE ASIA POWER INDEX 2023 EDITION			
ECONOMIC CAPABILITY		MILITARY CAPABILITY	
RESILIENCE			
MAP		RANKINGS	
RANK	SCORE	TREND	COUNTRY/TERRITORY
1	80.7	↘	UNITED STATES
2	72.5	↘	CHINA
MIDDLE POWERS (10+)			
3	37.2	↘	JAPAN
4	36.3	↘	INDIA
5	31.6	↘	RUSSIA
6	30.9	—	AUSTRALIA
7	29.5	↘	SOUTH KOREA
8	25.1	↘	SINGAPORE
9	19.4	—	INDONESIA

종합국력 7위=

- 1)경제력 5위+
- 2)군사력 5위+
- 3)위기극복능력(resilience) 10위+
- 4)미래자원 7위+
- 5)국제경제적 영향력 5위+
- 6)국방 네트워크 4위+
- 7)외교적 영향력 6위+
- 8)문화적 영향력 7위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Diplomatic Influence): 아시아 26개국 중 6위

- +1) 외교 네트워크(diplomatic network): 4위
- +2) 다자 차원의 외교 영향력 (multilateral power): **14위**
- +3) 외교역량 (foreign policy): **10위**



외교 네트워크: 4위

양자, 다자 공관의 숫자 (총영사관 포함)



다자차원의 외교 영향력 (Multilateral Power): 14위

+ 다자 정상회의체, 지역 및 글로벌 국제 기구/협의체 참여정도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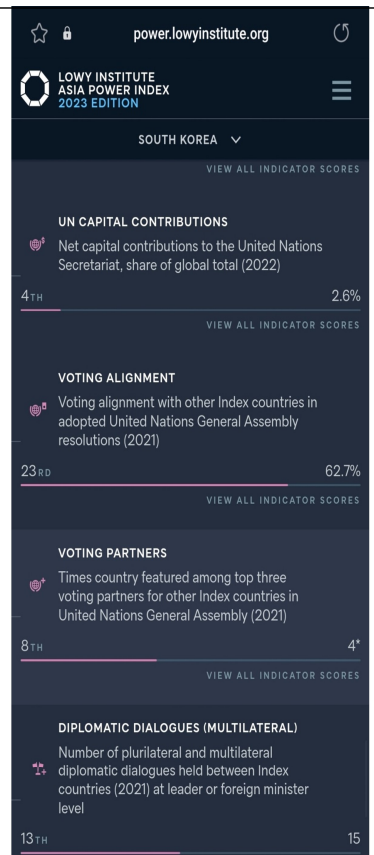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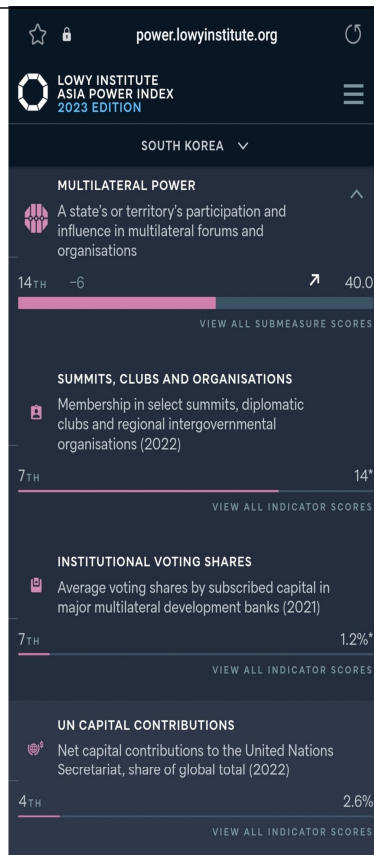
+ 주요 다자 개발은행 투표권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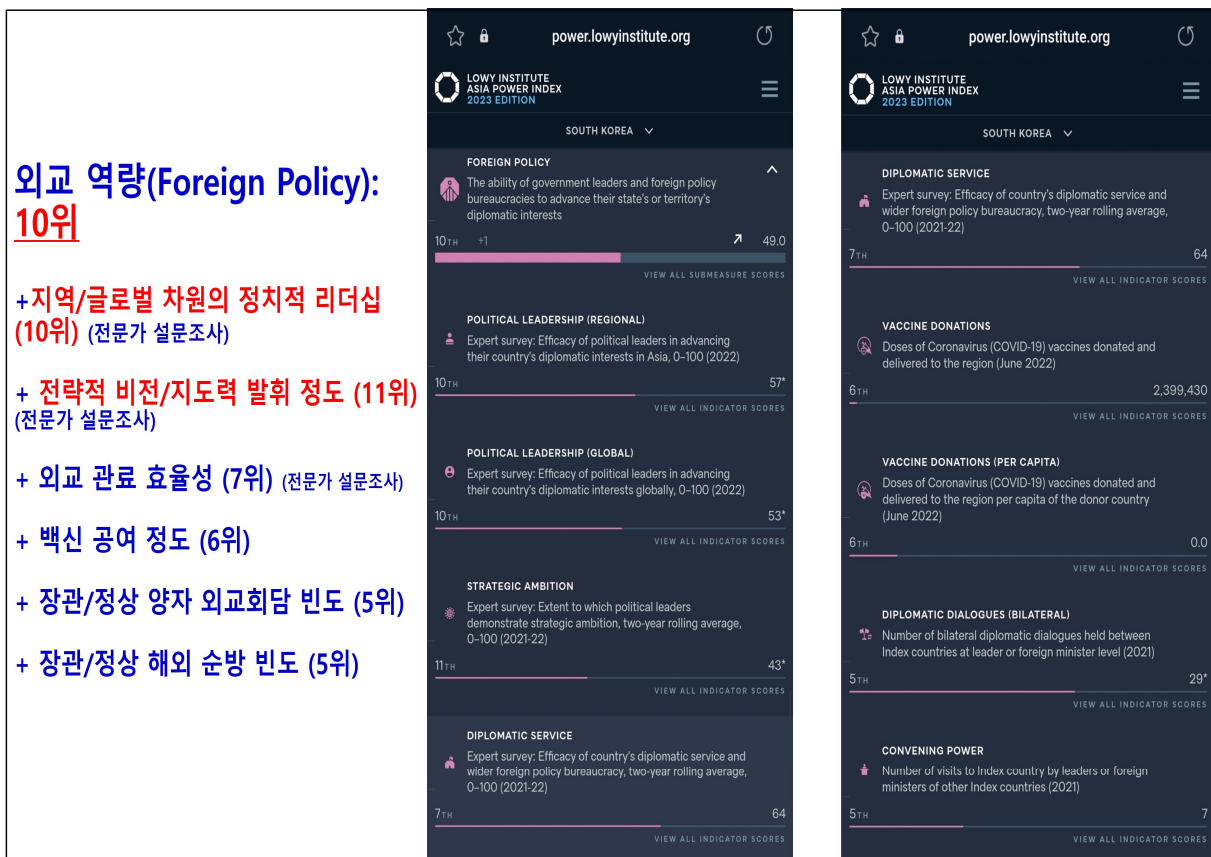
+ 유엔 분담금 (4위)

+ 유엔 총회 투표 행태 (23위)

+ 유엔 총회 투표 주도적 참여 정도 (8위)

+ 소다자/다자 협의체 참여 정도 (외교장관 또는 정상 수준) (1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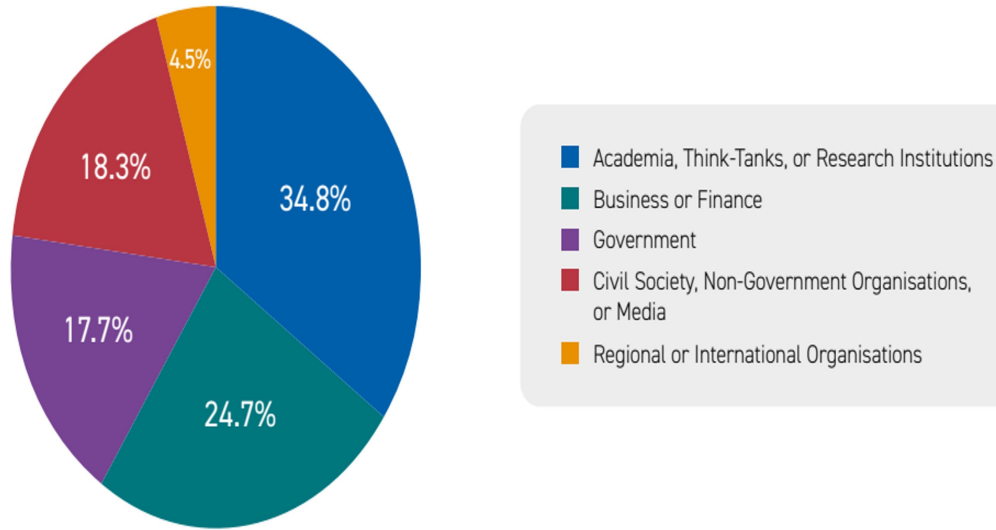


한국의 외교역량 평가: 참고자료 2

싱가포르, ISEAS Yusof-Ishak Institute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3: Survey Report.

<<https://www.iseas.edu.sg/wp-content/uploads/2025/07/The-State-of-SEA-2023-Final-Digital-V4-09-Feb-2023.pdf/>>

아세안 여론 주도층 1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022년 말 설문조사, 2023년 초 발표)



Q19 In your view, which country/regional organisation is the most influential economic power in Southeast Asia?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동남아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적 영향력

중국 대 미국:
59.9% 대 10.5%

Country	ASEAN		Australia		China		The European Union		India		Japan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ASEAN	7.6%	15.0%	0.5%	2.7%	76.7%	59.9%	1.7%	4.2%	0.1%	0.7%	2.6%	4.6%	0.5%	1.0%	9.8%	10.5%	0.5%	1.3%
BN	9.4%	10.0%	0.0%	5.8%	84.9%	44.2%	0.0%	7.5%	0.0%	4.2%	1.9%	12.5%	0.0%	2.5%	1.9%	6.7%	1.9%	6.7%
KH	9.9%	19.4%	0.0%	0.7%	84.0%	75.4%	1.2%	1.5%	0.0%	0.0%	0.0%	0.0%	0.0%	0.0%	4.9%	2.2%	0.0%	0.7%
ID	13.7%	19.0%	1.5%	0.0%	67.9%	71.1%	0.0%	1.7%	0.0%	0.0%	5.3%	3.3%	1.5%	0.0%	8.4%	5.0%	1.5%	0.0%
LA	2.3%	29.9%	0.0%	16.8%	86.4%	20.6%	6.8%	16.8%	0.0%	0.0%	0.0%	6.5%	0.0%	1.9%	4.5%	5.6%	0.0%	1.9%
MY	11.1%	12.1%	0.0%	0.8%	72.6%	65.3%	1.5%	2.4%	0.0%	0.0%	3.0%	2.4%	0.0%	1.6%	11.9%	13.7%	0.0%	1.6%
MM	2.6%	4.3%	0.0%	0.9%	83.4%	72.2%	1.4%	1.7%	0.0%	0.9%	4.3%	5.2%	1.4%	0.0%	6.0%	13.9%	0.9%	0.9%
PH	6.3%	25.3%	0.8%	1.0%	65.8%	36.4%	2.8%	2.0%	0.0%	0.0%	5.3%	7.1%	0.8%	1.0%	18.3%	26.3%	0.3%	1.0%
SG	3.6%	10.6%	0.0%	0.5%	81.1%	70.7%	1.4%	1.4%	0.0%	1.0%	1.8%	1.9%	0.0%	0.5%	12.2%	13.5%	0.0%	0.0%
TH	7.7%	8.3%	1.7%	0.7%	69.2%	74.3%	0.9%	2.8%	0.9%	0.7%	4.3%	3.5%	1.7%	0.0%	13.7%	9.0%	0.0%	0.7%
VN	9.7%	11.0%	0.7%	0.0%	71.5%	69.1%	0.7%	4.4%	0.0%	0.0%	0.7%	3.7%	0.0%	2.2%	16.7%	9.6%	0.0%	0.0%

Q20 What is your view of this economic power's influence on your country?

187 respondents who chose the "ASEAN" option in Q19; 810 respondents who chose the "China" option in Q19; 136 respondents who chose the "The US" option in Q19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동남아의 인식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64.5%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환영: 65.7%

Country	ASEAN				China				The United States			
	I am worried about its growing regional economic influence		I welcome its growing regional economic influence		I am worried about its growing regional economic influence		I welcome its growing regional economic influence		I am worried about its growing regional economic influence		I welcome its growing regional economic influence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ASEAN	22.3%	39.1%	77.7%	60.9%	64.4%	64.5%	35.6%	35.5%	31.9%	34.3%	68.1%	65.7%
BN	40.0%	16.7%	60.0%	83.3%	55.6%	13.2%	44.4%	86.8%	0.0%	12.5%	100.0%	87.5%
KH	0.0%	53.8%	100.0%	46.2%	29.4%	50.5%	70.6%	49.5%	25.0%	66.7%	75.0%	33.3%
ID	33.3%	56.5%	66.7%	43.5%	60.7%	50.0%	39.3%	50.0%	45.5%	50.0%	54.5%	50.0%
LA	0.0%	31.3%	100.0%	68.8%	65.8%	72.7%	34.2%	27.3%	100.0%	50.0%	0.0%	50.0%
MY	0.0%	40.0%	100.0%	60.0%	55.1%	61.7%	44.9%	38.3%	37.5%	35.3%	62.5%	64.7%
MM	44.4%	20.0%	55.6%	80.0%	87.3%	79.5%	12.7%	20.5%	23.8%	18.8%	76.2%	81.3%
PH	4.0%	44.0%	96.0%	56.0%	76.4%	83.3%	23.6%	16.7%	13.7%	26.9%	86.3%	73.1%
SG	25.0%	27.3%	75.0%	72.7%	73.9%	61.9%	26.1%	38.1%	25.9%	21.4%	74.1%	78.6%
TH	33.3%	75.0%	66.7%	25.0%	66.7%	86.0%	33.3%	14.0%	18.8%	46.2%	81.3%	53.8%
VN	42.9%	26.7%	57.1%	73.3%	72.8%	86.2%	27.2%	13.8%	29.2%	15.4%	70.8%	84.6%

Q21 In your view, which country/regional organisation has the most political and strategic influence in Southeast Asia?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전략적 영향력에 대한 동남아의 인식

중국 대 미국: 41.5% 대 31.9%

Country	ASEAN		Australia		China		The European Union		India		Japan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ASEAN	11.2%	13.1%	0.8%	3.0%	54.4%	41.5%	0.8%	4.9%	0.2%	0.9%	1.4%	1.9%	0.6%	1.7%	29.7%	31.9%	0.8%	1.1%
BN	22.6%	4.2%	1.9%	7.5%	39.6%	45.0%	0.0%	9.2%	0.0%	5.0%	0.0%	5.8%	1.9%	7.5%	34.0%	13.3%	0.0%	2.5%
KH	7.4%	6.0%	0.0%	0.7%	75.3%	72.4%	0.0%	3.0%	0.0%	0.0%	0.0%	0.0%	0.0%	0.0%	17.3%	17.9%	0.0%	0.0%
ID	16.0%	24.8%	3.1%	1.7%	38.2%	29.8%	2.3%	5.0%	0.8%	0.8%	1.5%	1.7%	1.5%	0.8%	35.1%	35.5%	1.5%	0.0%
LA	13.6%	17.8%	0.0%	14.0%	75.0%	30.8%	0.0%	17.8%	0.0%	0.9%	2.3%	0.0%	0.0%	2.8%	9.1%	13.1%	0.0%	2.8%
MY	20.0%	21.8%	1.5%	3.2%	51.1%	35.5%	0.7%	0.8%	0.0%	0.0%	0.7%	1.6%	0.0%	0.8%	24.4%	33.9%	1.5%	2.4%
MM	2.0%	4.3%	0.0%	0.9%	70.9%	40.0%	1.1%	1.7%	0.0%	0.0%	3.4%	1.7%	2.3%	0.0%	19.7%	49.6%	0.6%	1.7%
PH	8.3%	18.2%	0.3%	0.0%	37.0%	30.3%	1.3%	3.0%	0.3%	0.0%	1.8%	2.0%	0.0%	2.0%	51.0%	44.4%	0.3%	0.0%
SG	4.1%	12.0%	0.0%	1.0%	48.2%	33.2%	0.0%	2.4%	0.0%	2.4%	0.0%	1.0%	0.0%	0.0%	46.8%	48.1%	0.9%	0.0%
TH	7.7%	9.0%	0.9%	0.7%	55.6%	45.8%	2.6%	2.8%	0.9%	0.0%	2.6%	1.4%	0.0%	2.8%	27.4%	36.1%	2.6%	1.4%
VN	10.4%	13.2%	0.7%	0.7%	52.8%	52.2%	0.0%	2.9%	0.0%	0.0%	2.1%	3.7%	0.7%	0.0%	32.6%	27.2%	0.7%	0.0%

Q22 What is your view of this political and strategic power's influence on your country?

168 respondents who chose the "ASEAN" option in Q21; 546 respondents who chose the "China" option in Q21;
429 respondents who chose "The US" option in Q21

미국과 중국의 동남아에서의
정치적/전략적 영향력
에 대한 인식

중국의 정치적/전략적 영
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68.5%

미국의 정치적/전략적 영
향력 확대에 대한 환영:
55.8%

Country	ASEAN				China				The United States			
	I am worried about its growing regional political and strategic influence		I welcome its growing regional political and strategic influence		I am worried about its growing regional political and strategic influence		I welcome its growing regional political and strategic influence		I am worried about its growing regional political and strategic influence		I welcome its growing regional political and strategic influence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ASEAN	19.9%	40.3%	80.1%	59.7%	76.4%	68.5%	23.6%	31.5%	37.4%	44.2%	62.6%	55.8%
BN	16.7%	0.0%	83.3%	100.0%	81.0%	5.6%	19.0%	94.4%	27.8%	31.3%	72.2%	68.8%
KH	0.0%	37.5%	100.0%	62.5%	45.9%	52.6%	54.1%	47.4%	64.3%	58.3%	35.7%	41.7%
ID	33.3%	33.3%	66.7%	66.7%	66.0%	61.1%	34.0%	38.9%	50.0%	67.4%	50.0%	32.6%
LA	33.3%	42.1%	66.7%	57.9%	78.8%	63.6%	21.2%	36.4%	50.0%	42.9%	50.0%	57.1%
MY	11.1%	33.3%	88.9%	66.7%	62.3%	72.7%	37.7%	27.3%	51.5%	57.1%	48.5%	42.9%
MM	57.1%	60.0%	42.9%	40.0%	93.5%	84.8%	6.5%	15.2%	21.7%	28.1%	78.3%	71.9%
PH	12.1%	66.7%	87.9%	33.3%	88.5%	86.7%	11.5%	13.3%	24.0%	29.5%	76.0%	70.5%
SG	0.0%	20.0%	100.0%	80.0%	90.7%	69.6%	9.3%	30.4%	21.2%	39.0%	78.8%	61.0%
TH	22.2%	76.9%	77.8%	23.1%	76.9%	95.5%	23.1%	4.5%	46.9%	61.5%	53.1%	38.5%
VN	13.3%	33.3%	86.7%	66.7%	80.3%	93.0%	19.7%	7.0%	17.0%	27.0%	83.0%	73.0%

한국의 국제법 유지 지도력에 대한 신뢰: 0.8%

참고: 일본 (8.6%), 중국 (5.3%), 뉴질랜드 (2.9%)

Q24 Who do you have the most confidence in to provide leadership to maintain the rules-based order and uphold international law?

2022											2023										
Country	ASEAN	Australia	China	The European Union	India	Japan	New Zealand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Country	ASEAN	Australia	China	The European Union	India	Japan	New Zealand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SEAN	16.8%	1.9%	13.6%	16.6%	0.1%	7.7%	2.4%	0.8%	3.4%	36.6%	ASEAN	21.0%	3.4%	5.3%	23.0%	1.0%	8.6%	2.9%	0.8%	6.9%	27.1%
Brunei	28.3%	7.5%	1.9%	13.2%	0.0%	9.4%	5.7%	3.8%	13.2%	17.0%	Brunei	30.8%	5.8%	2.5%	20.0%	0.8%	14.2%	5.0%	2.5%	10.8%	7.5%
Cambodia	2.5%	0.0%	65.4%	7.4%	0.0%	3.7%	1.2%	0.0%	0.0%	19.8%	Cambodia	4.5%	0.0%	2.2%	38.8%	0.0%	4.5%	0.7%	0.0%	0.7%	48.5%
Indonesia	32.8%	1.5%	11.5%	22.9%	0.0%	7.6%	2.3%	0.0%	1.5%	19.8%	Indonesia	43.8%	0.8%	6.6%	16.5%	0.0%	9.9%	1.7%	2.5%	6.6%	11.6%
Laos	38.6%	0.0%	9.1%	13.6%	0.0%	27.3%	0.0%	0.0%	2.3%	9.1%	Laos	14.0%	17.8%	5.6%	29.0%	0.0%	6.5%	8.4%	0.0%	11.2%	7.5%
Malaysia	9.6%	3.0%	14.8%	18.5%	0.0%	3.7%	1.5%	0.7%	0.7%	47.4%	Malaysia	26.6%	4.8%	6.5%	19.4%	0.0%	10.5%	3.2%	0.8%	4.0%	24.2%
Myanmar	5.1%	1.1%	1.4%	16.9%	0.0%	5.1%	1.7%	2.9%	4.9%	60.9%	Myanmar	12.2%	0.0%	7.0%	6.1%	6.1%	11.3%	2.6%	0.0%	2.6%	52.2%
Philippines	23.0%	3.8%	0.3%	16.5%	0.0%	7.0%	2.5%	0.5%	3.0%	43.5%	Philippines	27.3%	0.0%	2.0%	16.2%	0.0%	10.1%	3.0%	1.0%	4.0%	36.4%
Singapore	6.8%	0.9%	4.1%	18.9%	0.0%	2.3%	0.9%	0.5%	4.1%	61.7%	Singapore	15.9%	2.9%	10.6%	24.5%	1.4%	5.8%	2.4%	0.5%	4.8%	31.3%
Thailand	9.4%	0.0%	16.2%	27.4%	0.9%	6.0%	7.7%	0.0%	2.6%	29.9%	Thailand	12.5%	1.4%	9.0%	32.6%	0.0%	6.9%	2.1%	0.7%	22.9%	11.8%
Vietnam	11.8%	1.4%	11.8%	11.1%	0.0%	4.9%	0.7%	0.0%	1.4%	56.9%	Vietnam	22.1%	0.7%	1.5%	26.5%	1.5%	6.6%	0.0%	0.0%	1.5%	39.7%

미중경쟁 구도에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3.2%

+ 아세안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신뢰: 26.6%

+ 베트남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29.4% 대 0.0%

+ 인도네시아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36.4% 대 4.1%

+ 싱가포르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25.5% 대 1.9%

+ 필리핀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39.4% 대 4.0%

Q32 If ASEAN were to seek out “third parties” to hedge against the uncertainties of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who is your preferred and trusted strategic partner for ASEAN?

Country	Australia		The European Union		India		Japan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Kingdom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ASEAN	10.3%	9.3%	40.2%	42.9%	5.1%	11.3%	29.2%	26.6%	6.8%	3.2%	8.4%	6.8%
Brunei	20.8%	8.3%	30.2%	54.2%	0.0%	6.7%	20.8%	19.2%	9.4%	6.7%	18.9%	5.0%
Cambodia	6.2%	1.5%	48.1%	79.9%	9.9%	6.0%	13.6%	9.0%	8.6%	0.0%	13.6%	3.7%
Indonesia	10.7%	7.4%	40.5%	38.8%	3.8%	9.9%	31.3%	36.4%	6.9%	4.1%	6.9%	3.3%
Laos	4.5%	16.8%	36.4%	42.1%	2.3%	13.1%	47.7%	18.7%	6.8%	1.9%	2.3%	7.5%
Malaysia	5.9%	10.5%	49.6%	31.5%	6.7%	12.9%	23.0%	27.4%	6.7%	4.8%	8.1%	12.9%
Myanmar	6.3%	12.2%	46.0%	14.8%	1.7%	21.7%	26.6%	39.1%	11.4%	1.7%	8.0%	10.4%
Philippines	19.0%	7.1%	34.5%	33.3%	3.0%	4.0%	34.5%	39.4%	1.8%	4.0%	7.3%	12.1%
Singapore	9.9%	18.3%	39.2%	38.9%	5.0%	10.6%	35.1%	25.5%	5.9%	1.9%	5.0%	4.8%
Thailand	8.5%	6.3%	41.9%	42.4%	7.7%	16.0%	25.6%	21.5%	6.8%	6.9%	9.4%	6.9%
Vietnam	11.1%	4.4%	35.4%	52.9%	11.1%	11.8%	33.3%	29.4%	4.2%	0.0%	4.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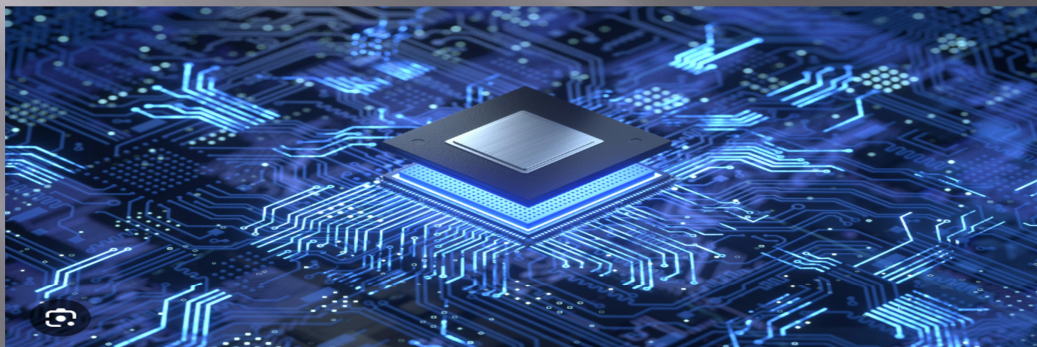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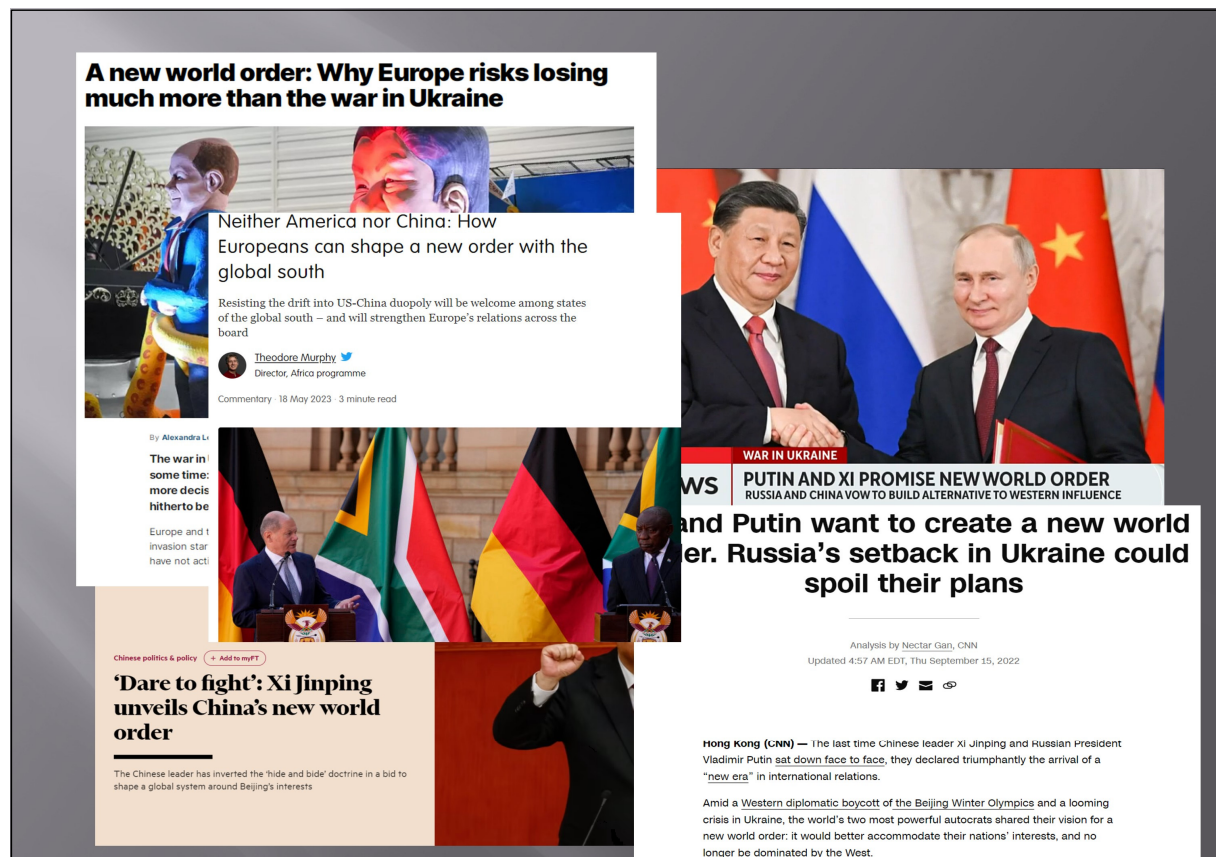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3.07.13.

동아일보 이정은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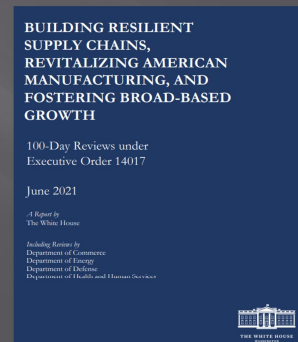




경제안보의 시대

- ▣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
- ▣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과 기술이 신형안보의 핵심으로 부상
- ▣ 미중 기술 패권경쟁 격화

Ex) 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YMTIC 등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중국 경쟁 2.0' 법안 추진
중: 마이크론 제재,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금속 수출 통제



디리스킹(de-risking)

▣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협공

-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연설 (3월30일)
- ✓ “디리스킹은 특정 국가의 강압에 종속되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확보”(2023.04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브루킹스연구소 강연)

Home > Press corner > Speech by the President on EU-China relations



Available languages: English ▾

Speech | 30 March 2023 | Brussels

Speech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EU-China relations to th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and the European Policy Centre

“국익은 소중하니까” 자국 우선주의 강화

▣ ‘America First’가 상징하는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 ✓ 조 바이든 대통령,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 ✓ IRA, Chips and Science Act 통과

▣ 합종연횡- 친구도 적도 없다?

- ✓ 오랜 우방이었던 사우디의 변심
- ✓ 인도의 양다리 걸치기
- ✓ 미국 CATL과 포드의 합작 사례
- ✓ 독일 등 유럽 정상들의 잇단 중국행

▣ 싸우면서 대화한다

- ✓ 미중 고위급 협의 재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방중
- ✓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대한 이견들이 있으며, 이를 다루는 데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계는 크다고 믿는다” (2023.07.08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중 기자회견)

국가대항전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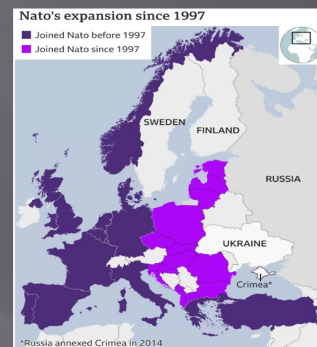
- ▣ 정부가 전면에 나선 '반도체 전쟁'
- ✓ 주요국 정부들은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 등을 앞세워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음.

ex) 미국, 반도체 육성 위해 52억 달러 보조금 투입
일본 정부의 '라피더스' 파격적 지원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국도 잇단 참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10년 간 6조4천억)

안보, 경제 블록화

- ▣ 신냉전 속 진영싸움 격화
-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지속
- ✓ 중국과 러시아 밀착
- ✓ NATO의 확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 갈래쳐서 뭉친다
- ✓ AUKUS, QUAD
- ✓ IPEF, Chip4 동맹
- ✓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의회, 더 바빠지고 세진다

- ▣ 대중 강경정책에 앞장서는 미국 의회
 - ✓ “비둘기파가 사라졌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 ✓ 행정부 정책, 전략 흔드는 미 입법 파워
- ▣ ‘반도체 부활’ 꿈꾸는 일본 의회
 - ✓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 ✓ 자민당 의원 100명이 참여하는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 설립
 - ✓ “관료에게만 맡겨서 수조 엔 투자가 되겠나”
 - ✓ (2023.06.19 아마리 아키라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회장 언론 인터뷰)
- ▣ 유럽연합(EU)
 - ✓ 유럽의회 반도체법 발의
 - ✓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가운데 유럽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430억 유로(약 61조 원)를 투입키로 함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 ▣ 초당적 협력
- ▣ AI, 우주 등 신흥 기술, 안보 이슈로 초점 확대
- ▣ 글로벌 기술, 첨단산업 경쟁에 선제적 뒷받침 ex) K-칩스법
- ▣ “이번엔 누구?” “왜 오는데요?” ... 분야별 전문성 강화
- ▣ 의원외교 업그레이드



발 간 일 2023년 7월
편 집 국회미래연구원
발 행 처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이 책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사무처·국회미래연구원, 2023

제5회 |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